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 간 부 후 보 2 교 시 (일 반)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과목별 코드번호

※ 시험 과목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01)

- 선택 : 범죄학(11), 행정법(02), 행정학(04), 헌법(10)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7.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학문상 개념이다.
-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보통경찰기관에 배분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해양경찰의 활동을 의미한다.
- ③ 「해양경찰법」 제14조의 직무는 제도상,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④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비, 해양안전, 범죄수사, 정보활동, 해양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등의 사항들도 그 성질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8. 「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수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통보가 가능하다.
- ② 해양경찰공무원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해야 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수사국장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9. 정보의 분류에 대한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정보
- ② 경찰업무에 따른 분류 - 보안정보, 범죄정보, 외사정보, 일반정보
- ③ 입수형태에 따른 분류 - 직접정보, 간접정보
- ④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1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②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③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11. 「어선안전조업법」상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해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 ④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은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을 제한한다.

12.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3. 다음 <보기>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출장소의 임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치안·안전 정보의 수집
 - ㉡ 관내 해양안전·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
 - ㉢ 선박 출입항 신고 접수 및 통제
 - ㉣ 관내 대항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 ㉥ 민원, 주민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경찰활동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 ㉧ 연안해역 안전관리

- ① 1개 ② 3개 ③ 5개 ④ 7개

14.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을 말한다.
- ② 출입통제장소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③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④ 정기점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양경찰서장 등이 합동으로 분기 2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기 > —
- ㉠ 「해양경비법」의 제정
 - ㉡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및 해양오염방제 업무 신설
 -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독립된 수사국 출범
 - ㉣ 해양경비대로 개편
 - ㉤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승격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6.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 : 감사담당관
- ② 해양경찰교육원 : 운영지원과장
- ③ 지방해양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
- ④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 행정지원팀장

17. 다음 <보기>의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18.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④ 해양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청구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다음 <보기>의 비교해양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미국 해양경비대는 현재 국토안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쟁시에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해군 소속으로 변경된다.
 - ㉡ 미국 해양경비대는 본부와 3개의 지역사령부(Area), 11개의 관구(District), 45개의 구역(Sector)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일본 해상보안청은 1948년 「해상보안청법」이 제정되어, 운수성 산하의 해상보안청으로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이관되었다.
 - ㉣ 일본 해상보안관의 신분은 일반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이다.
 - ㉤ 중국 해경국은 2013년 국가해양국을 출범시키며 국가해양국 해감총대, 농업부 어정총대,公安부 변방해경, 해관총서 밀수단속 경찰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 ㉥ 중국 해경국은 2021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군사위원회의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되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해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함·정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라 함정의 제반 행동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 ③ 공기부양정·예인정을 제외한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함정의 대외지원을 위해 경비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함·정장이 책임을 진다.

21. 다음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 보기 >
- ㉠ 총경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년이다.
 - ㉡ 경정의 계급정년은 ()년이다.
 - ㉢ 경장에서 경사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해야 한다.

- ① 22 ② 23 ③ 24 ④ 25

22.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 ② 해양에서 재난·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외관적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 ③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 ④ 해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2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원양어선·해상구조물 또는 선원·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역을 의미한다.
- ②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이상의 화물선, 고정식 해상구조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 ③ 누구든지 해적행위 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제4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없는 비위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요구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 (중략)

② 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비위에 (㉡)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행위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이 없을 것 ... (생략)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부터 별표8까지에 따라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하거나 은폐·비호했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	㉡	㉣
①	고의 또는 중과실	결과상의 결함	요구
②	고의 또는 중과실	절차상의 결함	묵인·방조
③	과실	결과상의 결함	묵인·방조
④	과실	절차상의 결함	요구

25. 해양경찰 내부통제의 수단 중 하나로 해양경찰 인권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 경찰청에 인권위원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을 둘 수 있다.
- ②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인권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등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 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수난구조 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14세 미만의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② 수난구조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③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 참여자 중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조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내규로 정한다.

27.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④ 해양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심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8.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수사자료의 감식·검토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써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여러가지 추측들을 검토한다.

29.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인·확보하고 나아가 이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평생의 직업으로 여기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무책임성이 발생하여 행정통제·행정책임 확보가 곤란해 질 수 있다.
- ④ 직업공무원제도의 선행조건으로 실적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불리한 제도이다.

30. 다음 <보기>의 정보요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 정보관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 ㉡ 정보요구 소순환 과정에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수집을 명함
- ㉢ 계속·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 ㉣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집되는 항시적 요구사항

- ① 첩보기본요소(EEI)
- ②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 ③ 특별첩보요구(SRI)
- ④ 기타정보요구(OIR)

31. 다음 <보기>의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 실종자의 추정위치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해역을 수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 ㉡ ‘ㄷ’자형 수색방법으로 현장에 여러 척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동시 수색이 요구된다.
- ㉢ 단점으로는 수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수색 효율성이 떨어진다.

- ① 부채꼴 수색(Sector search)
- ② 확대사각 수색(Expanding square search)
- ③ 항로 수색(Track line search)
- ④ 평행 수색(Parallel sweep search)

32.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일반경비해역과 특정경비해역으로 구분하며, 일반경비해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특정경비해역은 합대사령관이 담당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관할 합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다음 <보기>의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배치해야 할 체험활동별 안전관리요원의 총합은 얼마인가?
(다른 예외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 보기 > —
- ㉠ 수상형 체험활동객 23명 참가
 - ㉡ 수중형 체험활동객 25명 참가
 - ㉢ 일반형 체험활동객 17명 참가

- ① 4명 ② 6명 ③ 8명 ④ 10명

34.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다음 <보기>에서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 ㉡ 항공기의 이함(離艦)·착함(着艦) 또는 탑재
 - ㉢ 잠수항행
 -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선동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 ㉦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해양경찰 조직의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 : 해양경찰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권한·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형성된 피라미드형 구조를 의미한다. 계층제는 조직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지만, 너무 지나친 계층제의 확대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한다.
-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통솔의 범위를 넓게 하면 계층이 늘어나고 엄격한 관리로 구성원의 창의성이 위축된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 : 부하는 한 사람의 감독자 또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명령의 중복을 피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 ④ 조정과 통합의 원리 : 해양경찰조직과 구성원의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는 원리이다. 조직의 모든 구성체가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질서정연한 행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36. 유·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선장 및 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 ②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 ③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 ④ 서울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37. 「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외사 업무와 관련된 경찰의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군함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 ④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제정보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조활동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할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③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39. 다음 <보기> 중 유해액체물질(HNS)의 분류에 대해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 ㉠ 해양에서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 | | ㉠ | ㉡ | ㉢ |
|---|-------|---------|---------|
| ① | X류 물질 | - Y류 물질 | - Z류 물질 |
| ② | Y류 물질 | - X류 물질 | - Z류 물질 |
| ③ | Y류 물질 | - Z류 물질 | - X류 물질 |
| ④ | X류 물질 | - Z류 물질 | - Y류 물질 |

40.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2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한 후 매각한다. 국가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도 해체한 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외교·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운용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해양경찰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할 해양경찰장비의 명세, 무상양여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범 죄 학

1. 뒤르케임(Durkheim)의 범죄관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다.
 - ② 범죄는 기능적인 것이다.
 - ③ 범죄는 상황적인 것이다.
 - ④ 범죄는 필연적인 것이다.
2.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지 아니하여 공식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 ② 우리나라는 암수범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범죄피해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 ③ 마약범죄와 같이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범죄에 많다.
 - ④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는 됐으나 용의자 신원 미파악 등 미해결된 사건은 상대적 암수 범죄로 분류된다.
3. 범죄자의 장기적인 범죄경력 연구에 가장 적합한 조사설계는?
- ① 횡단적 조사설계
 - ② 반복횡단 조사설계
 - ③ 패널 조사설계
 - ④ 코호트 조사설계
4. 미스(Miethe)와 마이어(Meier)의 구조적 선택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동기화된 범죄자
 - ② 대상의 매력성
 - ③ 노출의 정도
 - ④ 보호력의 부재
5. 폭스(Fox)와 레빈(Levin)이 분류한 대량 살인범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복수형 살인범(Revenge Killers)
 - ② 사명형 살인범(Mission Killers)
 - ③ 이익형 살인범(Profit Killers)
 - ④ 사랑형 살인범(Love Killers)

6. 중화의 기법 중 다음 <보기>의 연구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 보기 > —

1971년 메나헴 아미르(Menachem Amir)는 필라델피아에서 강간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미르는 여성피해자가 흔히 도발적인 복장을 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마조히즘 성향을 보이며 강간범과 관계를 가지려고 함으로써 공격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① 책임의 부정
 - ② 가해의 부정
 - ③ 피해자의 부정
 -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7.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 중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e-후킹(Hooking)
 - ② 스푸핑(Spoofing)
 - ③ 스미싱(Smishing)
 - ④ 비싱(Vishing)
8.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 예방모형에 따를 때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이웃감시
 - ② 상황적 범죄예방
 - ③ 민간경비
 - ④ 환경설계 범죄예방
9. 상황적 범죄예방의 5가지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을 잘못 짚지은 것은?
- ① 노력의 증가 - 범행대상의 견고화, 시설의 접근통제
 - ② 보상의 감소 - 자산 식별하기, 목표물 제거
 - ③ 위협의 증가 - 자연적 감시력 제고, 마약 및 알콜 통제
 - ④ 변명의 제거 - 안내문 게시, 규칙 정하기
10. 렉클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이 말하는 범죄유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리화(Rationalization)
 - ② 유인(Pull)
 - ③ 배출(Push)
 - ④ 압력(Pressure)

11. 다음 중 레페토(Repetto)가 분류한 전이(Displacement)의 유형과 유형별 사례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영역적(Territorial) 전이 - 상점의 경비가 강화되자 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것
 - ② 전술적(Tactical) 전이 -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다가 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자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것
 - ③ 기능적(Functional) 전이 - 경비 강화로 절도가 어려워지자 대신 강도를 저지르는 것
 - ④ 시간적(Temporal) 전이 - 야간에 절도를 하다가 야간 시민순찰이 실시되자 오전에 절도를 하는 것
12. 우리나라의 현행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②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 ③ 특별양형인자들이 일반양형인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 ④ 형량범위 결정 시 해당 특별양형인자의 개수보다 그 내용과 질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13. 사이코패스(정신병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에서는 이를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구별한다.
 - ② 유전적·생물학적 요인보다 후천적·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 ③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도구는 슈나이더(Schneider)가 개발한 PCL-R이다.
 - ④ 무정성 정신병질자는 롬브로조(Lombroso)가 말한 생래적 범죄인에 가깝다.
14. 다음 중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 ②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이다.
 - ③ 도구적 범죄란 범죄자의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범법행위를 의미한다.
 - ④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15.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예측은 사실상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형에 따르면,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 ② 전체적 평가법은 대상자의 소질과 인격 전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종합분석하여 그 사람의 범죄성향을 임상적 경험에 의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 ③ 통계적 예측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범죄예측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범죄 또는 비행을 예측하는 것이다.
 - ④ 1928년에 버제스(E.W. Burgess)는 ‘경험표’라고 불렀던 예측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6. 성격과 범죄 관련성을 검사하는 방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이 지칭하는 것은?

— < 보기 > —

비행성이 있는 성격과 그렇지 않은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됐다.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14세 이상 정상인 대상의 성격 측정 지필검사다.

- ① MBTI 검사
- ② CPI 검사
- ③ 과제통각검사
- ④ 로르샤흐검사

17. 공격성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 중 다음 <보기>의 설명이 지칭하는 것은?

— < 보기 > —

정신치료감호소에 있는 폭력범죄자들의 경우 이것의 수치가 높을수록 과도한 공격성을 보였으나, 반대로 폭력범죄자들에게 낮은 수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결국 높고 낮은 수치 모두 도구적 공격성과 관계가 있다.

- ①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 ② 세로토닌(Serotonin)
- ③ 도파민(Dopamine)
- ④ 모노아민(Monoamine)

18. 다음 <보기> 중 밀러(Miller)가 하층계급 사람들의 중심적인 관심사항(Focal Concerns)으로 제시한 항목들만으로 묶인 것은?

- < 보기 >
- ㉠ 자율성(Autonomy)

㉡ 악의성(Maliciousness)

㉢ 운명주의(Fatalism)

㉣ 부정성(Negativism)

㉤ 쾌락주의(Hedonism)

㉥ 자극(Excitement)

㉦ 영악함(Smartness)

㉧ 강인함(Toughness)

㉨ 비실리성(Non-utility)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9.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노미 이론에 비해 긴장을 보다 개인적 수준에서 바라보았다.

② 긴장의 원인을 다양화하였다.

③ 아노미 이론에 비해 긴장에 대한 폭력적 반응도 잘 설명할 수 있다.

④ 긴장 상태에 있는 모두가 범죄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

20. 학습이론가들과 그들의 핵심 주장을 가장 옳지 않게 연결한 것은?

- ① 서덜랜드(Sutherland) - 범죄 행위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학습된다.

② 클레이저(Glaser) - 사람들은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애착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③ 버제스(Robert L. Burgess) - 범죄로부터 얻을 만족에 대한 기대감이 부정적 기대감을 상회할 때 범행하기 쉽다.

④ 렉클리스(Reckless) - 동일한 비행적 접촉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하는 이유는 자아관념의 차이 때문이다.

21. 허쉬(Hirschi)가 말한 사회적 유대의 네 가지 요소 중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애착(Attachment)

② 관여(Commitment)

③ 참여(Involvement)

④ 신념(Belief)

22. 다음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 < 보기 >
- 가. 성과 계급, 가족구조를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고려하면서 범죄를 설명하였다.

나. 부모는 가족 내에서 자신들의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과 지위가 자녀의 범죄성에 영향을 준다.

다. 부모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비슷한 권력을 소유하는 평등한 가정에서 자란 딸은 아들과 비슷한 수준의 비행을 저지른다.

- ① 헤이건(Hagan)

② 메셔슈미트(Messerschmidt)

③ 티프트(Tifft)

④ 설리번(Sullivan)

23. 범죄원인론 중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터크(Turk)는 갈등의 개연성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양자의 조직화 정도와 세련됨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② 셀린(Sellin)은 전체 사회의 규범과 개별집단의 규범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개인도 이러한 종류의 갈등이 내면화됨으로써 인격해체가 이루어지고 범죄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③ 볼드(Vold)는 범죄를 법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본다.

④ 갈등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문제는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는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24.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낙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의 개념과 그것을 제시한 학자를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①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 레머트(Lemert)
② 주 지위(Master Status) - 베커(Becker)
③ 자기완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 슈어(Schur)
④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 탄넨바움(Tannenbaum)
25. 고전주의 범죄학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형법 및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② 사람은 욕구 충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범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③ 범죄를 그것에 따른 위험과 이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선택한 결과적 행위로 본다.
④ 법률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의문을 제기하고 법관의 법 해석상 자율권을 인정한다.
26. 범죄에 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③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④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27. 범죄피해자학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마약 복용, 성매매 등 행위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대인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를 모두 범죄피해 구조대상으로 본다.
④ 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범죄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하였다.
28. 환경설계 범죄예방(CPTED)의 배경이 되는 범죄학 이론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뉴먼(Newman)의 방어공간이론
② 윌슨(Wilson)의 합리적 선택이론
③ 콜빈(Colvin)의 잠재특성이론
④ 클라크(Clarke)의 상황적 범죄예방론
29.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집단회합
② 전자장치부착
③ 양형써클
④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30. 화이트칼라 범죄의 통제방법 중 법을 따르도록 시장의 인센티브를 만들려는 시도로 행위자보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분산전략
② 환원전략
③ 억제전략
④ 준수전략
31. 클라크(Clarke)는 절도범죄와 관련하여 VIVA 모델과 CRAVED 모델을 제시하였다. 두 모델의 구성 개념들은 일부 중첩되는데, VIVA 모델에서 말한 관성(Inertia)은 CRAVED 모델의 무엇과 가장 가까운 개념인가?

① 가치성(Valuable)
② 접근성(Available)
③ 이동성(Removable)
④ 처분성(Disposable)
32. 다음 범죄학자들의 주장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코헨(Cohen)은 중산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하위계층 출신 소년들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문화나 가치체계와는 정반대의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② 머튼(Merton)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불일치로 범죄를 설명하였다.
③ 셀린(Sellin)은 동일한 문화 안에서의 사회변화에 의한 갈등을 1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고, 이질적 문화 간의 충돌에 의한 갈등을 2차적 갈등이라고 설명하였다.
④ 라까사뉴(Lacassagne)는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범죄원인은 결국 사회와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3.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밀행주의
 - ② 예방주의
 - ③ 과학주의
 - ④ 개별주의
34. 여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여성은 신체적으로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② 신여성범죄자 개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여성범죄율 변화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하였다.
 - ③ 폴락(Pollak)은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만, 은폐 또는 편견적 선처에 의해 통계상
적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 ④ 여성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상황적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행을 반복해서 자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35.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억제이론은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효과를
강조한다.
 - ② 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 ③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④ 억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다.
36. 울프강(Wolfgang)과 페라쿠티(Ferracuti)의 폭력적
하위문화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력적 하위문화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 폭력적 하위문화에서 폭력적 태도는 차별적 접촉을
통하여 형성된다.
 - ③ 폭력적 하위문화라도 모든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
하지는 않는다.
 - ④ 폭력적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와 항상 갈등상태를
형성한다.

37. 모피트(Moffitt)의 발전이론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 ② 거리 효율성(Street Efficacy)
 - ③ 성숙 격차(Maturity Gap)
 - ④ 생애지속형 범죄자
38. 그로스(Groth)의 폭력적 강간의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학성 변태성욕 강간
 - ② 지배 강간
 - ③ 스틸추구적 강간
 - ④ 분노 강간
39. 범죄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조사는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 ② 범죄율과 범죄시계는 인구변화율을 반영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③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④ 참여적 관찰법은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40.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느 학자의 이론을 언급한
것인가?
- 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되는 피통제 양의 비율
(통제비)로써 범죄와 피해를 설명한다.
나. 두 개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순응이 발생하나,
그것이 불균형을 이루면 범죄와 피해가 발생한다.
- ① 티틀(Tittle)
 - ② 패링턴(Farrington)
 - ③ 콜빈(Colvin)
 - ④ 헨스타인(Herrnstein)

행 정 법

1.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제한 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 대한 금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③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 ④ 여권발급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불확정 법개념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과서 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정책적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검정상의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 ③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
- ④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 발굴허가’는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 ②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에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 ③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석허가에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산림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 ②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이 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전제로 되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그 처분 이전에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와 사업승인권능을 사실상 양수받아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 ③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④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
- ③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된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계획이나 처분에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
- ②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없다.
- ③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 ④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7. 행정행위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②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③ 부당한 수취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 ④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甲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행한 협약해지와 정부지원금반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처분이다.

9. 「행정절차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국적법」 제5조 각호와 같이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10. 행정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의 상급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② 처분의 성질상 이유의 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 ④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②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서식]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② 공법인인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는 적법하다.
- ③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④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 의무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

1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또한 가능하다.
- ②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히무효이다.
- ③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매처분을 하면서 채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 당연히무효의 처분이다.
-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채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6.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에게 시행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사법적으로 심사하여 그 적용을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 ④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17.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후에는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8.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공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명칭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③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면서 그 학교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
- ④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20. 다음 <보기>에서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락 없이 어선을 정박시켜 이용해 왔던 어업자들이 백사장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종래의 백사장 이용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용폐지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 ㉢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 ㉣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2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한다.
- 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③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된다.
-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 다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甲은 A시청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 어업허가의 기간은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 설정되었다. 그런데 甲은 2023. 9. 1.에 어업허가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A시청은 甲이 신청한 어업허가의 어구 및 어선의 규모가 2023. 9. 1. 현재 수산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 ① 종전의 어업허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허가는 신규허가에 불과하다.
- ② 종전의 어업허가의 효력은 2023. 6. 30.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③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 ④ A시청이 甲의 어업허가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23.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 ②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④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인들에게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4.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단서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 ③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봉급의 일부만 지급받는다.
- ④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권면직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5. 다음 <보기>에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 ㉡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 국·공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와 국유 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처분으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 ① ㉠

② ㉠, ㉡
- ③ ㉠, ㉡, ㉢

④ ㉠, ㉡, ㉢, ㉣

2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다음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28. 수상레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 甲은 해양경찰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乙과 관련한 정보를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을 포함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설립목적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되므로 甲의 법인 등기여부와 설립목적 등을 정보공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해양경찰청에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해양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열람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 ③ 해양경찰청이 甲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甲은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甲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9.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화물차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와 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적법한 보호조치이다.

30.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갖는다.
- ②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 ③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④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32.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정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3.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②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해졌다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 ③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 ④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채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34.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 ②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5.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는 甲은 백사장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 시장 乙로부터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주민 A, B, C는 甲에 대한 공유수면점용 허가는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주민소송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는 단독으로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 ③ 공유수면점용 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민소송은 허용된다.
- ④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36. 다음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② 연령미달자가 그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히 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취소판결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7.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행정처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
- ②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8. 다음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사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집행된 처분이 된 경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39.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 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40. 甲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A해양경찰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 ㉠ 甲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A해양경찰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甲에게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甲이 하나의 행위로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A해양경찰서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정한 질서위반행위를 기준으로 2분의 1의 과태료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 甲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ㄷ, ㄹ

행 정 학

1.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기업
 - ② 직접 대출
 - ③ 보조금
 - ④ 경제적 규제
2.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자유주의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 ②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하였다.
 - ③ 정치행정일원론과 뉴딜정책은 큰 정부와 관련이 있다.
 - ④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큰 정부를 지향하였다.
3.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잭슨(Jackson) 대통령은 엽관제를 통해 정부관료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 ② 20세기 후반부터 인사행정에서 엽관제의 명분과 전통이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 ③ 고위공무원단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s)는 엽관제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 ④ 플럼북(plum book)의 존재는 엽관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극복방안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개혁지도자의 신망을 개선하고 의사전달과 참여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 ②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개혁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 ③ 기술적·공리적 전략은 개혁의 가치와 개인이득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④ 강제적 전략은 개혁 시기를 조절하고 상급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은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가 낮은 경우 인간관계형으로 분류한다.
 - ②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는 리더십을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으로 구분한다.
 - ③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친목형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 ④ 리더십 이론은 속성론으로부터 시작해 행태론을 거쳐 상황론으로 발전해 왔다.
6. 예산결정이론으로서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 ②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③ 점증모형은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 ④ 합리모형은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7. 다음 <보기>의 주민참여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면?

— < 보기 > —	
㉠ 주민소환	㉡ 주민투표
㉢ 주민감사청구	㉣ 주민발안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8.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중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 ① 계속비
 - ② 수입대체경비
 - ③ 이용
 - ④ 사고이월

9.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태주의적 관점에서는 갈등을 일종의 악으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 ② 조성전략은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 ③ 해소전략은 갈등 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 ④ 집단 간 갈등의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10. 부패방지제도와 관련성이 가장 부족한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국민감사청구권
- ③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④ 국가인권위원회

11.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만족모형은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 ② 린드블롬(Lindblom)은 점증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③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 달리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 ④ 점증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합리모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12.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②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위원장은 차관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 ④ 적극행정 추진체계상 적극행정 총괄 및 제도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13. 다음 <보기>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업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 ㉡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 ㉢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 하에 전개되어 왔다.
 - ㉣ 능력에 따른 채용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적극적 대표성이란 사회의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정부의 관료구성 비율에 비례적 형평성을 두는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본적 귀속의 착오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높게 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 ② 총계적 오류는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집중화 및 관대화 경향 등 분포상의 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은 강제배분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④ 후광효과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15.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기관이 아니다.
- ②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 ③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6.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유사한 면이 있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③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보다는 적지만 기금보다는 크다.
- ④ 특별회계보다 기금의 수가 더 많다.

17.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제기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모델과 달리 정책대안이 문제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 ②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s)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을 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관료, 학자, 언론인 등 정책공동체 내 누구라도 정책기업가가 될 수 있다.
- ④ ‘정책의 창’은 정책의 흐름의 변화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18.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와 수단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며, 목표달성도에 따른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중시한다.
- ② 하향적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적 접근법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 ③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써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④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정책결정자가 정책상황의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고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19.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정책 수립과 부처 인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 ② 기존의 ‘정부24’를 전면 개편한 온라인 통합민원창구 ‘민원24’가 운영되고 있다.
- ③ 모든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나라장터’가 운영되고 있다.
-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20. 쓰레기통모형의 기본적인 전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갈등의 준해결 - 정책결정과정에서 하위부서들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고 타협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다.
- ② 불명확한 기술 -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③ 수시적 참여자 - 동일한 개인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참여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④ 문제성 있는 선호 - 참여자 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

21.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는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 ②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 ③ 예산의 신축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매년 1~2회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22.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는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서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 ② 허즈버그(Herzberg)는 보수와 작업조건을 개선 하더라도 직무수행동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③ 브룸(Vroom)이 말하는 수단치(instrumenta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아담스(Adams)는 공정한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3. 다음은 조직의 직무구조 설계를 위해 직무 전문화와 과제 성격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 분		수직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평적 전문화	높음	(㉠) 직무	(㉡) 직무
	낮음	(㉢) 직무	(㉣) 직무

- ㉠ ㉡ ㉢ ㉣
- ① 일선관리 비숙련 전문가적 고위관리
- ② 일선관리 비숙련 고위관리 전문가적
- ③ 비숙련 전문가적 일선관리 고위관리
- ④ 비숙련 전문가적 고위관리 일선관리

24. 다음 <보기> 중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관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 ‘소극적 자유’ 강조

㉣ 소외집단의 지원정책 비선호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민영화한 결과 만들어진 기관이다.

② 기관의 성격은 준정부기관이다.

③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나 소속 구성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④ 해양경찰정비창 등을 포함하여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26.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종합 정책 질의가 이루어진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비상설기구라는 특징이 있다.

④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원회 활동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7.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분류 체계의 기본틀로 형성되었다.
- ② 계급제는 계급군 간의 수직적 폐쇄성이 강하나 직위분류제는 수평적 폐쇄성이 강하다.
- ③ 계급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직에 적합한 반면, 직위분류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 ④ 계급제는 개방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나 직위분류제는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

28. 다음 <보기>는 예산의 원칙이다. 기금은 이 원칙 중 어떤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모두 고르면?

< 보기 >

㉠ 공개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통일성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 단일성의 원칙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29. 조직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구조는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쉽다.

②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③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 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④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30.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직장협의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 ③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협의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④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31. 조직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주로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 ② 사회적 인간관은 경제적 유인보다 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조직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촉진한다.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대표하는 이론에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과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인 등이 있다.
- ④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의 동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32.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시각은 공익의 과정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② 신행정학자들은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효과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 ③ 뉴거버넌스론자들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 ④ 정치행정이원론자들의 주된 관심은 민주적 대응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3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인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 새로운 성과주의예산의 도입에 따라 품목별 예산제도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③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서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4. 듀브닉과 롬젝(Dubnick & Romzek)은 통제의 소재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높은 통제수준	(㉠)	(㉡)
낮은 통제수준	(㉢)	(㉣)

- ① ㉠ - 관료적 책임성
- ② ㉡ - 법적 책임성
- ③ ㉢ - 전문가적 책임성
- ④ ㉣ - 제도적 책임성

35.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과 함께 단기간의 급격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 ②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하위시스템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정책하위시스템 안에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지지연합이 존재한다.
- ④ 정책하위시스템 구성원들의 신념체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외생변수의 변화도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36. 홉스테드(Hofstede)의 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문화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거리 차원에서는 권력거리가 강한 특성이 있어 권력자의 결정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 ② 남성성-여성성 차원에서는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해 여성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온정주의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④ 불확실성 회피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무원들의 선례답습 행태도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37.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 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②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 ③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인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
 - ④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38. 애자일(agile)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라미드형 위계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 민간기업 중에서는 애자일 조직을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 ③ 불필요한 관리자 계층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 ④ 조직의 계층을 줄여 최고 의사결정자가 민첩하게 의사결정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39.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뿐만 아니라 성인지 기금결산서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무역보험기금은 비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 ③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④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여유재원을 전·출입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0. 조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은 조직의 원리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 ② 해양경찰청 대변인은 참모보다는 계선에 가깝다.
 - ③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전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고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

헌 법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③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법률조항은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④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 ③ 「범죄인 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압수·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4.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③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④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② 관계 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할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④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공 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측정 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
- ②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 ③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 ④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③ 피보안관찰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등 현황을 신고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자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신병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육군 신병교육지침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 ③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0.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지주회사법」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④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된다.

11.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동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 등 청구인 주장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공무원 연금은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토지재산권은 그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12.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② 「민법」 제3조 및 제762조가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③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1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하고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 제도를 정하는 구 「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사법시험의 실시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과 절차에 관한 것이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법의 수권 없이 규정하였다거나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14.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아래에 있다.

③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1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회에 청원을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16.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게만 부여할 뿐 국민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②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환경권 침해 내지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이 궁극적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만 포함될 뿐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17.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의 경과로 인한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또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가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은 필요하다.
- ③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④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만 제기할 수 있다.

18.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지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② 침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도 있어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 ④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19. 다음 <보기>에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 ㉡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일 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내포하고 있지 않다.
- ㉢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도 이에 포함된다.
- ㉣ 정리해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20.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피고인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서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④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② 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헌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 ④ 민주주의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3.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4.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공무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
 - ②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③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누진율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안기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조항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국제협력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되어 일정한 봉사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헌법에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25.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 ②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 ③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26.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②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 ④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 조직인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7. 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그 전문에서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는바, 그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 ③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의 범위를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 ④ 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헌법전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28. 인격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하였더라도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항은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9. 국민투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 ②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 ③ 국민은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④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0. 다음 <보기>에서 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 ㉡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은,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이 있다.
- ㉢ 헌법상의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31.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의 문화육성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 및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고 해서 초·중·고등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일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개성과 창의성·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 ④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2.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중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위임의 구체성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33.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원리라는 두 가지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 ②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그 존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
- ③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이지만 입법자를 기속하는 원리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34.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택건설촉진법」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유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
- ②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 ③ 사회국가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 ④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35.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 ③ 독과점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회복에 있으므로 독과점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36. 조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약에 해당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도 포함된다.
- ④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37.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③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다.
- ④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3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3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청원 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0. 다음 <보기>에서 제9차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국가의 적정임금보장 규정을 신설하였다.
-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 ㉢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 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추진 규정을 신설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